

제 3 교시

논술

성명

수험 번호

1. <사례>를 읽고 <의견>을 활용하여 <조건>에 따라 논술하십시오. (900~1200자, 50점)

<조건>

- (1) K국의 입법자로서 우선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1개의 입법안을 선택하고 <의견>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작성할 것
- (2) 시기상조론이나 절충론은 배제할 것
- (3) 다른 2개의 입법안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것
- (4) 입법안을 활용할 때는 1안, 2안, 3안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것
- (5) <의견>을 활용할 때는 의견①, 의견⑩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것

<사례>

K국에서는 성형수술과 성형시술(이하 성형수술로 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성형수술은 의료 목적 이외에 외모를 바꿔 사회적으로 유리하게 평가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에 대한 무분별한 성형수술, 범죄나 혐오 표현과 관련된 성형수술, 신분 관련 서류의 부정 제시나 발급과 관련된 성형수술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K국은 이러한 성형수술을 규율하기 위하여 「성형수술 규제 및 피해방지법」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러 논의만 계속되고 있어 가장 시급하게 금지되어야 할 부분을 먼저 입법하기로 하였다.

이에 K국은 3가지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1안: 차별이나 혐오 표현 등에 해당하여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성형수술은 금지한다.

2안: 얼굴이나 신체의 외관 등 생체 정보를 전면적으로 변경하여 타인으로 오인하게 하는 성형수술은 금지한다.

3안: 심신이 성장 단계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부모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금지한다.

<의견>

- ① 특정한 인종이나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문안을 담은 성형수술을 해서 사회 갈등을 조장하기도 한다.
- ② 은행에서 신분증이나 외관 또는 지문 인식 등으로 본인을 확인하는데 과도한 성형수술을 허용하면 그 피해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갈까?
- ③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 개인은 주권을 가지기에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한 어떤 행동도 개인의 자유로 인정되어야 해.
- ④ 청소년들이 요즘 인기 절정인 연예인을 닮도록 성형수술을 하고 싶어 하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허용해도 되는 것 아닐까?
- ⑤ 최근 중범죄자의 모습대로 성형수술을 하고 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 ⑥ 오늘날은 정보보안기술이 발달해서 디지털 신분 확인 방법이 대체로 전통적인 얼굴 확인이나 지문 식별 방법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신분을 파악할 수 있다.
- ⑦ 성형수술은 자신을 위한 것이므로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개인의 자율에 맡겨야 해.
- ⑧ 청소년은 즉흥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형수술을 결정할 때도 그렇지 않을까?
- ⑨ 외모가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서 성형수술에 돈을 너무 많이 들인다고 해.
- ⑩ 범죄자가 얼굴이나 지문 성형수술을 악용해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거나 체포를 면하는 경우가 있다.

2. <사례>를 읽고 <의견>을 활용하여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900~1200자, 50점)

<조건>

- (1) <의견>을 활용하여 K국의 결정을 지지하거나 반박하시오.
- (2) 정책A와 정책B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시오.
- (3) <의견>을 활용할 때는 의견①, 의견⑧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시오.

<사례>

K국 인공지능정책연구원이 전국 중고등학생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사용 이유로는 관심과 호기심이 가장 많았고 수업이나 과제 활용, SNS 게시물 제작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K국에서는 청소년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생성하거나 각종 범죄 방법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언론 보도가 발표되었다. 또한 해당 언론 보도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의 문해력과 사고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K국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가 13세 미만 청소년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서비스 이용을 허용하는 자율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정책A). K국은 현재의 규제만으로는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와 역량 개발에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16세 미만 청소년의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연 매출의 5% 범위에서 징벌적 의미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제를 입안했다(정책B).

K국은 정책B에 관한 찬반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책B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B를 찬성하는 그룹에는 학부모와 교사 등이, 정책B를 반대하는 그룹에는 청년층과 과학기술자 등이 주로 포함되었다.

K국은 정책A의 대안으로 제시한 정책B에 대한 반대 여론이 예상외로 높게 나온 것을 당혹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K국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역기능을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청소년 정신건강의학자·교육학자·범죄심리학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B를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의견>

- ① 어떤 규제가 의도한 효과를 실제로 발휘하는지는 사후적으로 확인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면 시범 실시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 ② 규제는 인간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반드시 행위 유도에 효과적이고 필요한 만큼의 강제적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 ③ 다수의 의견이 항상 정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여론에 의존하는 정책 결정은 소수의 권리를 억압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 ④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자율 규제가 강조되지만 이 역시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 ⑤ 규제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해야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⑥ 어떤 지식이 이로운지 또는 해로운지는 그 수용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하므로 현실적인 해악이 발생하기도 전에 특정 지식의 이용을 사전에 금지해서는 안 된다.
- ⑦ 국가는 가정의 문제에 원칙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되고 자녀 교육 영역에서 부모의 결정을 국가의 판단으로 대체하는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⑧ 규제는 그 대상자가 수용할 때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정책에 다수 국민의 의식을 반영해야 한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답안의 분량 미달과 분량 초과는 같은 기준으로 감점됩니다.